

‘월급 동결’ 뿔난 교장들... “평교사보다 적어”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1.7% 인상...학교장 동결 1월 과지급된 22만원 이달 급여서 차감...‘분노’ “같은 경력 평교사보다 보수 낮아...질서 파괴” “교사·교감·교장 직급 따른 호봉제 도입해야”

전국의 교장들이 정부의 급여 동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실수로 더 지급한 보수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한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는 15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 회장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회는 성명서에서 “4급 상당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했는데, 4급 상당인 학교장도 보수 동결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교장회는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돼 나타난다”며 “보수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 과지급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장회에 따르면 1.7% 인상분과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이달 차감되는 보수는 약 22만원이다.

송재범 교장회 회장(신서고 교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월가인상을 반영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으로 받아들인다”며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당국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장회는 또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

는 직급별 별도 호봉 체계지만, 교원은 평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독특한 단일 호봉제”라며 “이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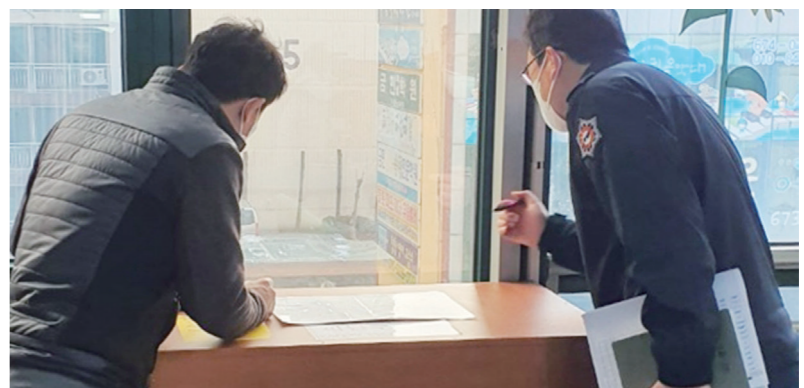
서선욱기자



광주선거관리위원회, ‘함께하는 깨끗한 선거’ 공동홍보 캠페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동광주점에서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와 ‘함께하는 깨끗한 선거’ 공동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부소방, 남구요양병원 등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에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담양소방,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한걸음 더

담양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기간 관내 1급 대상 및 연면적 상위 10% 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소방, ‘트래킹 클리너’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

무안소방서는 겨울철 전기화재를 저감하고 ‘트래킹 클리너’ 무료대여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무안을 전통시장 강남을 맞아 플래카드 가두 행진과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전기시설 안전사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양소방,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광양소방서는 지난 14일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화재안전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경찰, 삼일동 통장단 회의서 범죄예방 홍보활동 실시

여수상일파출소는 지난 14일 삼일동 주민센터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 주요 추진사항·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밤 10시까지 ‘무상돌봄’에...시민들 “근무 환경 개선이 더 절실”

유치원 온종일 돌봄, 오후 5시~10시 운영...식석 제공 시민·교사·전문가 “육아 시간 보장이 근본적인 해결책”

서울 지역 거점유치원 12곳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반가워하면서도, 노동 현실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1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시내 12곳 유치원에서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온종일돌봄 교실’이 도입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저녁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현 소속 기관에서 거점유치원으로 이동할 때는 거점 버스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은 자녀 돌봄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환영하면

서도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 4세 아이를 둔 한부모 가정 유모(35)씨는 “통상 6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면 7시 30분인데 일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거나 야근을 하면 9시가 되어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다”며 “돌봄이 늦게까지 되는 데다 저녁까지 주는 유치원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근 자체가 줄고 육아 휴직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맞벌이하러는 제조업 근로자 박모(43)씨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기치 못한 야근이나 전업이 줄어들고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앞서 근로 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네트즌들은 “애들을 맡길 곳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육아시간을 보장해서 부모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들의 근로 시간을 합법적으로 눈치 안 보고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 정책 이전에 근로 정책을 먼저 손봐야 할 듯싶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의 유치원 교사들도 노동 문화 개선 없이 돌봄 서비스만을 늘리는 것은 유아 교육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다.

12년 차 유치원 교사 임모(35)씨는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씩 먼저 떠나면 남겨진 아이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한다”며 “현장에서 놀이 지

도 등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하고 우울해한다”고 말했다.

16년 차 유치원 교사인 조모(39)씨도 “아이들이 10시까지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육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정책을 두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자 보니,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며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점점 보육 서비스의 시간을 늘리고 아침 저녁까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녀 근로자 모두 장시간 노동하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 재정만 늘릴 뿐이다”며 “노동하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돌봄과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눈시를 뿜는 만학도

15일 서울 중구 바비엡2교육센터에서 열린 2022 학년도 초등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서 한 만학도 졸업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애인 폭행·횡령 혐의’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항소심에서 감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생계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벤엘의집’ 원장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 모두 중증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시설 농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개인적 용도보다 시설에 썼고, 보조금 등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고 장애인 학대와 업무상횡령·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리원들이 진술한 걸 보면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걸 발견한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도 당시 급식을 먹어 장애인에게 일부러 먹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체에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최이슬기자